

이대식

본회 회원,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IMF관리하의 한국경제

I. IMF관리하의 경제현황

“바베크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
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富)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제 18 14, 16-7)”

최근 우리경제는 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일시에 망하였도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점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고 세계11위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면서 한국형 성장모형(Korean Model)이라는 성장신화를 만들어 내었던 한국경제가 갑작스러운 외환위기사태에 몰리면서 국가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충격적 사태를 맞게 되었다.

2 MF관리하의 한국경제

지난해 12월 3일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시작한 이후 단기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IMF로 부터의 외환차입으로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단기해외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돈을 빌려준 해외 금융기관들이 채무의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신규로 추가여신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변제 불이행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IMF가 국내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출규모를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자 은행들은 기존의 대출은 회수하고 신규대출은 중단함으로써 심각한 신용위기로 국가경제가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달러가격이 1달러 당 2,000원 이상으로 올랐으며 사채시장의 실질금리는 연 100% 이상으로 치솟아 사실상 가격이 무의미해지는 최악의 신용부족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가 이어져 상장기업의 절반이상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의 사실상 부도와 마찬가지로의 가격으로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올해 들어서 IMF와 우리 정부가 합의한 경제지표들을 보면 GNP성장을 3%이하 통화증가를 9% 이하(최근 재협상을 통하여 14%로 재조정됨), 물가상승을 5%이내로 묶으면서 20%대의 고금리 유지와 재정긴축등으로 향후 더 많은 한계기업의 도태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 그리고 명목임금의 하락조차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경제가 경제공황과 같은 사태에 빠지게 된 원인과 책임을 밝혀 보고 현 경제위기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회생의 방안과 이러한 사태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와 기학연은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 갔나이다.(예레미야애가 5: 1-2)”

최근의 한 외신에서는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유래가 드물지만 일국의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도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연히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경제가 IMF의 지원을 받게된 가장 큰 이유로써 정부의 경제운용의 실패와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을 꼽고 있다.¹⁾ 외국의 한 경제주간지는 구체적으로 경직된 관료주의, 대기업의 무모한 중복투자, 강성노조와 취약한 금융산업을 지적하고 나아가 국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양비론에 안주해온 정치인, 언론인 및 학자들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국민의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나,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과 같은 국민정서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원인을 규명하여 제대로 처방을 내리기 위하여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문제들 간의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혀야 한다.

■ 우선 우리경제가 IMF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 직접적인 단초는 왜채상환을 위한 외환의 부족에서 비롯된 외환위기와 여기에서 발생한 신용금융위기이며, 그 이면에는 실물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정부의 경제운용의 실패로 보는 데는 대개 다음의 3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구조의 모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구조

1) 일반국민(61.6%)과 국내경제전문가(44.2%)의 경우 정부경제운용을 첫 번째 문제로 꼽은 반면 국내거주 외국인기업가(60.2%)들의 경우는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여 사각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경제연구소, 「한국경제위기에 대한 국민경제 의식조사」1998.1 (보도자료)

4 MF관리하의 한국경제

를 보면 총 금융대출의 70%를 증금, 투신, 보험, 리스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며 은행권의 여신이 30%에 불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감독은 한국은행이 아닌 재경원이 하며, 은행의 경우라도 외환에 관하여는 재경원의 외환정책과에서 감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는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중앙은행이 총여신의 불과 15-20%만을 통제할 뿐이며 실질적인 금융감독의 권한과 의무는 재경원 금융정책실 산하의 몇 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둘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이 단선적이며 독단적이어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단초는 종합금융사들이 상환기간 1년 미만의 단기부채를 대량차입하여 국내 기업의 장기투자자금으로 조달했고 일부는 태국 인도네시아등의 시장에 채투자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증금사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감독업무는 재경원의 외환정책과에 속한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재경원의 몇몇 서기관, 사무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채무규모의 60%이상이 악성단기부채라는 점을 들어 외환위기를 경고한 한은, KDI 및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묵살되거나 통제당했다고 한다. 중요한 정보가 소수의 관리에게 독점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이 재검토되어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체계(system)가 없다는 것이다. 재경원 장관과 경제수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팀의 독단적 정책운용과 현실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시대에는 금융이 국가를 지배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의 무역의존적인 나라에서는 이웃국가의 금융위기가 곧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동남아 외환위기가 빠르게 부상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들의 신용이 추락하고 있을 때에도 정부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경제의 거시적 기초여건(macro fundamental)은 튼튼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수립에

소홀했다.¹⁾

셋째는 이러한 정부의 위기관리의 실패는 경제정책을 대선전략에 종속시키는 정치권의 편협한 정치계산에 의해 증폭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한 보사태로 시작한 작년의 우리 경제는 기아의 부도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32조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부도유예협약과 협조용자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덮어보려 하였고, 이는 대선을 의식한 여당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관계된 금융개혁법안이 대선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정치계산에 의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수출의 증가에 의해서 외환위기를 잠재울 수만 있다면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의 버티기전략을 취했으며 이러한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는 훨씬 더 파국적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줄지에 망한 것 같은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 외환위기관리의 실패라는 표면적 현상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일차적 원인은 우리기업의 경쟁력 상실에 있다. 우리기업의 상품은 고비용 구조하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무려 400%에 달하는 부채비율²⁾때문에 우리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기업의 현금흐름에 애로가 생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다한 차입경영을 해 왔을까? 과거의 관치금융하에서 이자율은 규제되어 왔고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면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가 되는 시절을 통해 기업을 키워왔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이른바 대마

1) 당시 재경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중국등과의 외환스왑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비상시 이들 국가로 부터 외환을 빌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이들 국가 역시 부실국가에 무턱대고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으며 IMF라는 채권기관을 통하여 혹독한 댓가를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처는 우리쪽의 일방적 단견이었음이 드러났다.

2) 참고로 미국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0%('95년 기준)이며 대만은 96%('95년 기준)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훨씬 높다.

6 MF관리하의 한국경제

불사(大馬不死)론의 신화를 만들면서 타인자본으로 외형성장위주의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 대마불사란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통한 기업그룹을 만들면 비효율적인 기업도 침몰하지 않고 버틸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경제개발 전략상, 국가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대기업의 도산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대마불사론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들 대기업에 집중되는 근거이기도 했다.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성장전략은 한국경제의 고속성장과 덩치키우기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고 이러한 성장전략으로 단기간에 현재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성장할수록 과거의 국가위주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기대거나 국가의 규제에 기대어 시장을 확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세계시장 안에서 당당히 자신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우리나라 기업경영이 방만한 수 밖에 없는 원인은 기업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못한 소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후진성이다. 영미권의 경우는 주식시장을 통해 경영실패를 추궁할 수 있고"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경영을 감독한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유경영자에 의하여 기업이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경영자가 잘못할 경우 기업경영의 부실을 감독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최근 파산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당수의 재벌을 보면 2세 경영자의 자질부족과 창업주와의 차별화를 위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중복투자나 과잉투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경영의 감독자가 없다는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동일하다. 부도 일보직전의 기업의 재무제표도 언제

1)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자는 주주이고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다.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기업수익이 줄어 들고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회사 전체의 가치에 비해 주식가격이 낮을 경우 주식의 대량매집으로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경영진도 쫓겨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위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압력을 통하여 경영감독이 이루어 진다.

나 정상이었고 감사의견도 적정이었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기업 을 보면 특정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소유경영자에 의해 여타 주주의 동의없이 특 정기업의 자산이나 잉여가 임의로 이관되거나 유출되므로 도무지 투자하 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 이러한 한국기업의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정부와 금융이 정한 성장위주의 전략하에서 보면 당연한 면도 없지 않다. 정치권력, 관치금융 과 밀착하여 자금과 사업권을 확보하고 내수시장과 영업권의 보호를 받 으며 사업을 키워던 기업이 성공기업의 대명사였던 것이 어제까지의 분위기 였다. 아마도 빌 게이츠나 아이아코카가 한국에서 기업을 했더라도 지금 의 대기업 총수와 같았을 것이라는 자조어린 이야기도 있다. 관치금융하 의 성장일변도의 경제규칙 하에서 재벌들이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기 술력향상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본질과는 맞 지 않는 기대일 것이다. 따라서 경기의 규칙이 기업부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경기의 규칙만 바꾸면 기업은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새로운 규칙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신을 할 것이다.

사실 IMF가 요구하는 시장개방과 금융개혁은 WTO체제의 출범이후 상 당부분 개혁의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여건이 WTO체제하의 세계화시대에서 과거의 성장위주의 경제운용체제를 -이를 테면 많이 빌려서(高借入) 사업을 확장하여(高投資) 덩치를 키우는(高成 長)방식-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¹⁾. 경제전체의 구조조 정과 정부규제철폐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경제운용방식의 근본적인 개 혁 없이는 세계경제속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많은 외부로

1) 이러한 현상을 한 때 '고비용(고금리, 고임금, 고지대, 고물류비등)저효율구조'라는 단어로 요약된 바가 있으며 당시 정부의 대책은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이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대응이다. 왜 20% 올리자 10% 올리기를 하는지 알 수없다. 이때부터 이미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제의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했었어야 했다. 안국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자세,' 『나라경제』, 98. 1. pp. 15-17

8 MF관리하의 한국경제

부터의 요구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기득권자 내지는 지도계층은 이러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왜 그런가? 제도경제학자 노스(Douglas North)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제도도 상당기간 고착되어 지속되는데 이는 그러한 제도하에서 이익을 얻는 제도의 제정자집단(예를 들면 정치세력과 관료)이 그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며, 주어진 제도하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들(예를 들면 대기업집단)이 그 제도를 보다 더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IMF를 통한 외부로부터 강제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태이며, 이것은 재앙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촉복인 것이다.

III. 극복방안과 교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이사야 60: 10-11)”

■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강제에 의한 새로운 경기의 규칙을 세우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사회가 IMF관리라는 채찍을 맞게 된 것은 사후적으로 당연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해야 하겠지만, 사전적으로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그리고 사회 각 계층에 부패와 오만이 만연한 시점에서 경기침체와 대선정국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위기라는 절묘한 시나리오를 통해 현재의 상태로 몰고 오신 하나님의 강한 섭리를 느끼게 된다.

많은 극복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1) Douglass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사태를 막기위해 IMF와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이를테면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외국인의 국내기업 국내금융기관의 소유허용,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호지급보증의 철폐와 연결채무제표의 작성,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의 확대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MF의 요구를 수동적으로만 따라가기 보다는 현재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맞는 경기의 규칙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¹⁾ IMF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부의 조항은 채권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부분이며 높은 달러가치와 고금리하에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들은 정당성의 문제와는 별도로 채무국의 입장인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비용인 셈이다. 그러나 IMF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은 우리의 경제운용규칙의 공정성과 경제주체의 합리성과 도덕성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 기업과 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의 규칙하에서 행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전체 국민의 합의와 시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실패를 심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룹은 민주자본주의 체제의 이론적 틀 안에서 보면 시민과 소비자이다. 여러 저작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의 시민과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미숙하며 합리적 소비의 훈련이 부족하다. 나아가서 시민그룹으로서 또한 소비자 그룹으로서 정치대리인을 선출하거나 그들을 감시하며, 생산자의 부실과 횡포를 견제할 그룹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이 점이 우리의 정치경제가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교회가 기독교 시민운동을 통해

1) 사실 우리의 국가부도사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지만 세계경제에서의 우리의 비중을 생각할 때 선진국들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향후로도 IMF와의 대화를 통한 재협상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IMF가 요구하는 통화공급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같은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여겨진다. 이는 마치 대수술을 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와 같다. 살리기 위한 수술을 하면서 결국 환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교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경제의 운용방식의 틀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생산물인 상품시장이 모두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정을 감독하고 시장의 실패를 어느선 까지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하여진 범위내에서는 관료에 의한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상세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기학연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연구되어서 바람직한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유시장의 작동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성과 정직성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견제와 균형이 전제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경제시대에 민족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부터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전해 가야 하며, 여기에는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의 진보라는 장기적인 과제가 있다. 물론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진보의 필요조건은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주체들이 움직이도록 유인을 주는 제도(경기의 규칙)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식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창의성이란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을 존중하는 문화적 기반위에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 환경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현재의 우리사회는 철학 예술 과학이 대중속에서 향유되며 토론되는 인문학적 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없이는 미래의 지식사회를 열어가지가 난망하다. 이 점도 21세기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를 통하여 서로 배우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하며, 소비일색의 문화와 기업의 상업주의,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변혁의 일익을 감당해야 한다.

■ 사도요한이 계시록에서 기록한 바대로 우리가 탐하던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시계와 같이 정교하고 바벨탑과 같이 거대한 경제체제가 어느 한순간에 작동을 멈추게 되면 그 구조물에 의지했던 우리의 화려함과 편리함도 일시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임을 느끼게 된다¹⁾.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시련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간의 성장의 과실만을 받아온 이 땅의 젊은세대들에게는 더욱 값진 시련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막는데 있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가 성장 이데올로기로 갈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강조하기 보다는 교회조차도 세속적 성장에 의존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려 한 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의 때를 당하여 교회는 실의에 차 있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더욱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진력하여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국가위기가 극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되기만을 목표로 기도해서는 안된다. 다음 세기에 교회가 한국사회와 세계를 위해 어떠한 사명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목표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교회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경기의 규칙을 짜는 일에 교회가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학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88

1) 현실적으로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생활의 편리함이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험한 무역구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향후 에너지원과 식량의 개발수입이나 이를 위한 외환의 확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